



## 지방직 7급 행정학

◇ 난이도 : 중

◇ 예상 합격선 : 90점 이상(상위 20%)

◇ 문제특징 : 출제비율, 이해 위주의 출제경향성, 문항별 난이도 등 출제의 기본이 지켜진 균형 잡힌 시험이었습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대부분(18문제)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일부 기출변형 문제(A책형 기준 19번\_사회학적 신제도주의, 20번\_국고보조금)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충분히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고, 최근 인사혁신처의 출제경향이 반영된 시험이었습니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은 사례형 문제를 통해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가직 7급 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2문제)가 출제된 바 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4문제 가량이 출제되었습니다(A책형 기준 2번\_파생적 외부효과, 8번\_「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 11번\_내적타당성 저해요인, 20번\_국고보조금). 하지만 사례형 문제 역시 행정학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로, 수업을 통해 충분히 연습한 우리 수험생들이라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고득점도 무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학습방향 : '이론 → 암기 → 문제풀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나 신유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복 또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올해 7, 9급 시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라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더욱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을 테지만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수험생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험생분들은 2021년에는 반드시 합격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용한 드림 -

### 1. 출제영역분석

총론	5	재무행정론	3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1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1 (19, 20번)	신유형 문제	-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6	-	2	7	-	2	3

0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해설】** ①, ③, ④ [O]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특징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장,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의 주도, 역할 모호성의 제거,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 환경적·역사적 문화적 요소에 유의 등이다.  
 ② [X]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는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이다.

summary | 신공공관리 vs 탈신공공관리

비교국면		신공공관리	탈신공공관리
정부 기능	정부-시장 관계의 기본 철학	시장지향주의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재규제의 주장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 치 동시 고려
	정부 규모와 기능	정부 규모와 기능의 감축 •민간화·민영화·민간위탁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민간부문을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동 생산자 및 경쟁자로 규정 •내부시장화·계약·외주화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조직 구조	기본 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 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항구적·유기적 구조 •임시조직·네트워크 활용 •비계층적 구조 •구조적 권한 이양과 분권화	재집권화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 책임운영기관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관리 기법	조직관리의 기본 철학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 의 관리기법 도입 •경쟁의 원리 도입 •규정과 규제의 완화 •관리자의 자율성·책임성 강조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리 •능력·성과 기반 인사관리 •경쟁적 인센티브 중시 •개방형 인사제도	공공책임성 중시

0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 ① X - 비효율성
-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 ③ 비경합성
- ④ 파생적 외부효과

**【해설】** ④ [O] 정부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 이는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을 의미한다.**

**summary |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b>내부성 (사적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제 내에서 공익(공적 목표)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사적 목표)을 우선시하는 현상</li> <li>㉠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예산의 극대화), ㉡ Parkinson의 법칙, ㉢ 정보의 통제에 의한 권력 확대의 추구, ㉣ 비용을 도외시한 최신기술에 대한 집착, ㉤ 공익과 무관한 내부조직 목표의 설정 및 추구 등</li> </ul>		
<b>X-비효율성 · 비용체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관리상의 비효율(기술적 비효율)을 의미함.</li> <li>• 정부의 독점적 지위나 특정 민간기업에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함.</li> </ul>		
<b>파생적 외부효과</b>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 예) 경기회복정책이 경기과잉을 초래, 주택안정화정책이 부동산 투기 조장 등		
<b>권력의 편재</b>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상 예) 특혜적 기업면허, 진입장벽의 유지 등		
<b>비용과 편익의 절연</b>	정부활동의 특성상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절연)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 거시적 절연과 미시적 절연이 발생		
	<b>구 분</b>	<b>미시적 절연</b>	<b>거시적 절연</b>
	<b>개 념</b>	조직화된 소수의 수혜집단이 다수의 비용부담을 요구	다수의 수혜집단이 소수의 비용부담을 요구
	<b>활용수단</b>	포획	투표나 선거
	<b>관련정책</b>	규제정치모형 중 고객정치모형에 해당	규제정치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모형에 해당
<b>문제성격</b>	순수 경제적 문제	정치·경제적 문제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70

0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해설】** ① [X]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공무원의 봉급은 직종별로 여러 개의 봉급표(일반직, 전문경력관, 지도직, 연구직, 우정직, 경찰·소방, 군인 등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 3. 임기제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O]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 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③ [O]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④ [O]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올바른 지문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로 여러개(11개)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40, 541, 544, 546, 547

0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②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③ [O] 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국가재정법 제4조 【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O] 국가재정법 제21조

**동법 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X]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 올바른 지문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달리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07, 623~627



0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group design)

**【해설】** ①, ③ [X] 준실험적 방법의 유형에 해당한다. 준실험적 방법의 유형에는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 등이 있다.

② [O] 진실험적 방법의 유형에 해당한다. 진실험적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무작위배정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설계, 무작위배정에 의한 사전 및 사후 통제집단 설계를 들 수 있다.

④ [X] 비실험적 방법의 유형에 해당한다. 비실험적 방법의 유형에는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등이 있다.

summary | 실험 vs 비실험

구 분		실험 & 통제집단	조사설계 유형
실험	진실험	동질성 확보 ○ (무작위 배정)	무작위배정에 의한 실험집단·통제집단 설계, 무작위배정에 의한 사전 및 사후 통제집단 설계
	준실험	동질성 확보 × (짜짓기 배정)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 등
비실험		비교집단 ×	단일집단 사후측정,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07~309



0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 【해설】**
- ① [O] 국가조합주의란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국가주도의 강제적 조합주의를 말한다.
  - ② [X] 국가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원주의**는 국가는 여러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집단 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책결정이 된다고 보며, **주로 선진국의 정책참여자의 권력 모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된다.
  - ③ [O] 사회조합주의는 서구 선진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등장한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이다.
  - ④ [O] 다원주의에 따르면,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이익집단들 간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다. 다만, 잠재 집단에 대한 고려나 중복가입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203~207

▶ ②

0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의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다.
-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 【해설】**
- ① [O] 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 간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양태를 설명한다.
  - ② [X] 이슈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1970년대 후반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의 증가, 의회의 파편화 등으로 **안정적 하위정부체계가 깨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정책이슈에 따라 유동적·개방적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O]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 ④ [O]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특정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이므로,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다.

▶ 올바른 지문

- ②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summary |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하위정부 모형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관료 + 의회 상임위 +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
안정적 · 폐쇄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안정적(지속적, 장기적)
이해관계 일치 (동맹적)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의존적, 협력적, 신뢰 (Positive-sum game)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의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분배정책분야에서 주로 형성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 큼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정책내용 합리성 제고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209~213

08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해설】** ① [X]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와 상관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리의 의무】**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O]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동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O] 현행범일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속이 가능하다.

**동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O] 대통령의 허가를 받을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가 가능하다.

**동법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62~563



09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해설】** ① [X]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X]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준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국회의 사전의결 없이**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③ [O] 동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④ [X] 동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28~630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 한 것은?

- ㄱ.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이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ㄱ	ㄴ	ㄷ
①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②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③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④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해설】** ㄱ - 강제배분법, ㄴ - 산출기록법 ㄷ - 행태기준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ㄱ. **강제배분법**은 평가 시 피평정자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를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ㄴ. **산출기록법**은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일정한 시간당 수행한 작업량을 측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작업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이다.  
 ㄷ.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은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주관적 판단의 배제를 위해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이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16~520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정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하천의 오염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 ① 역사요인
- ② 검사요인
- ③ 선발요인
- ④ 상실요인

**【해설】** ① [O] 사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역사 요소(사건효과)이다. **역사 요소는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비의도적인 사건발생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례에서 수질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공장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년 후 정부는 오염도가 낮아진 것이 정책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수질개선의 효과가 공장가동을 저하 또는 오염수준 측정 전 갑작스런 비 때문이라면(경쟁가설), 비의도적인 사건발생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요소로 볼 수 있다.**

**summary | 내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선발요소 (선정요인)	실험집단구성 시 선발의 차이로 인한 오류(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등하게 선발되지 못하여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져 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
역사적 요소	실험기간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성숙효과 (성장효과)	시간 경과에 따라 실험집단 특성이 자연스럽게 성장·발전하는 것 허위·혼란변수로 작용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구성 시 선발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의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 속도에 의한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현상
상실요소	연구기간 중 실험집단의 일부가 탈락해 남아있는 최종 실험집단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
측정요소 (시험효과)	실험 전 측정할 그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 동일한 시험문제를 사전·사후에 사용하게 되면 사후 시험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
측정수단요소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측정도구요인)
회귀인공요소 (실험직전반응)	실험 전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오염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오염 또는 확산효과로서 모방, 정책의 누출, 부자연스러운 변이 등이 여기에 포함됨.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05



## 12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 【해설】**
- ① [O] 부패의 원인에 대한 도덕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도덕적 접근방법은 부패를 개인행동의 결과로 보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공적 역할을 지배하는 법규를 침해한 경우에 부패의 원인을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개인들의 윤리와 자질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
  - ② [X]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입장이다.
  - ③ [X] 제도적 접근방법의 입장이다.
  - ④ [X]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 summary | 부패의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사회문화적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우리나라의 선물관행이나 보은 의식과 같은 인사문화를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
제도적 접근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행정통제장치의 미비)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맥락적 접근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구조적 접근	공직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권력문화적 접근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시민문화적 접근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정치적·경제학적·정경유착적 접근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법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70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해설】** ① [X] 프리드리히의 현대적 책임론에 대한 설명이다. 파이너는 행정책임을 내면적 기준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것으로 보았다.  
 ② [X] 프리드리히는 외부적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나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강조하였다.  
 ③ [O]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④ [X]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프리드리히(Friedrich)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 ② 프리드리히는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 보다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을 강조하였다.
-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후자에 속한다.

summary | 행정통제

(1) 외재적 책임 vs 내재적 책임

구분	외재적 책임(제도적 책임) : Finer의 고전적 책임론	내재적 책임(자율적 책임) : Friedrich의 현대적 책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면적 기준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책임</li> <li>• 관료는 대중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책임져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적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li> <li>• 책임은 통제가 아니라 유도되는 것,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책임</li> </ul>

(2)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외부적 통제	내부적 통제
공식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일반적으로 의회소속)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 감사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중앙행정부처, 교차기능조직
비공식	시민, 정당, 선거, 투표 이익집단, 여론, 마스크, 인터넷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공무원의 직업윤리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760, 762



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해설】** ①, ②, ③ [O]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주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정보불균형, 정보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④ [X]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가 존재**한다면, 주인은 다른 **유능한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의 수가 적은, 즉 **독점 내지 과점의 상태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소수(또는 독점)의 당사자 존재**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54, 155

▶ ④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 ②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된 조직이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 【해설】**
- ① **[X]** 명령통일의 원칙은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한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로 이원적 권한체계가 특징인 매트릭스 조직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이다.**
  - ② **[O]** 태스크 포스(Task Force, 임시작업단)는 문제에 관련된 부서들의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로 일시적인 과제가 해결되면 TF는 해산된다.
  - ③ **[O]** 프로젝트팀은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장기간 협력이 필요할 때 적합한 장치로 대규모의 사업, 중요한 혁신 등이 필요할 때 채택하게 된다.
  - ④ **[O]**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사이의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 ②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국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동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O], ③ [X] 조합을 해산한 경우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른다.

**동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④ [O] 동법 제163조 제1항

**동법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올바른 지문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928~929



17 파머(Fa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해설】**
- ① [O] 타자성은 '타인'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에 대한 선호, 기존질서에 대한 반대 등을 의미하며, 포스트모더니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한다.
  - ② [X] 포스트모더니티는 모더니티(현대주의)의 핵심가정인 '인간 이성(reason)'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객관주의·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을 거부하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을 위한 '상상'을 중시한다.
  - ③ [O] 탈영역화란, 모든 지식의 성격과 조직에서 갖고 있는 '고유'영역이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스트모더니티 이론에 따라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라고 믿는 지식이 변화하고, 행정조직의 계층성이 약화되는 탈관료제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 ④ [O] 포스트모더니티는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를 요구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보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이 더 중요하다.

summary | 포스트모더니티 이론의 핵심개념과 행정(D. Farmer)

상상 (imag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의 관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고와 판단을 요구함.</li> <li>•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나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 등이 상상에 의한 것임.</li> </ul>
해체 (de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 등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li> <li>•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한다.' 는 명제에 대한 의문제기와 해체를 요구함.</li> </ul>
영역해체 (탈영역화 : deterritori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식의 성격과 조직에서 갖고 있는 '고유' 영역이 해체(탈영역화)된다는 의미</li> <li>•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라고 믿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행정조직의 계층성이 약화되는 탈관료제의 모습이 등장함.</li> </ul>
타자성 (alte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즉자성과의 반대개념).</li> <li>• 타자성은 '타인'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에 대한 선호, 기존질서에 대한 반대 등을 의미함.</li> </ul>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78~179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① [O] 국회법 제84조 제3항

**동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을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② [O] 동법 제84조 제6항

**동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O] 동법 제45조 제1항

**동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X]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올바른 지문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57~658, p.662

▶ ④

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 【해설】**
- ① [O] 배태성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관련된 특성으로, “어떤 현상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고유한 속성”을 의미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은 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그것이 배태된 문화적·역사적 틀 밖에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X]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과 합리성 추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설명한다.
  - ③ [O]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는 그 조직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의 결과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기업의 오염방지장치 도입 및 장애인 고용 확대는 강압적 동형화의 예이다.
  - ④ [O]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는 환경이 불확실할 때 성공적인 조직을 본받으려는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의 예이다.

summary | 제도적 동형화의 유형

강압적 동형화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 그 조직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의 결과
모방적 동형화	환경이 불확실할 때 성공적인 조직을 본받으려는 동기에서 일어남
규범적 동형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한 전문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동형화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51~152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지방비70%)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 ③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X] 문제에서 국비 지방비율이 3:7 이므로 국고보조금이 56억(30%)이 배정될 계획이었다면, 비율에 따라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1억(70%)이다.
  - ② [X] 수돗물과 생수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정상재이며, 수돗물 증가는 생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대체재이다. 따라서 수돗물의 수질이 좋아지면 국민들이 저렴한 물소비가 가능해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실질 소득증가는 수돗물 공급과 생수 공급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저렴한 수돗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수돗물 공급이 생수의 공급을 대체하는 대체효과도 유발한다.

구분	개념
정상재 (normal goods)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
소득효과	상품의 가격의 하락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그 상품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
대체효과	A와 B의 동일한 용도의 물건이 있을 때 A의 가격이 내리면 그전까지 B를 사던 사람이 A를 사게 되는 현상

- ③ [O]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고 적정수준의 공급,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 ④ [X] 정액보조란 특정한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그 예로 지방교부세가 있다. 정률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만약 A 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1억이다.
-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 뿐 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증가가 생수의 공급을 대체하는 대체효과를 유발시킨다.
-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정률보조금에 해당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888